

#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THE NEWSLETTER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https://www.keas1967.com>) / 발행인 김도기 / 편집인 이재덕 / 편집팀 김재현, 김어진, 유나은, 박민우 / E-mail keas1967@daum.net  
주소 (0415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9층 902호(도화동, 마스터즈타워빌딩)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국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https://www.keas1967.com>)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 1+1=3이라는 시각과 장기적 안목에서 유보통합 바라보기

엄 문 영 | 서울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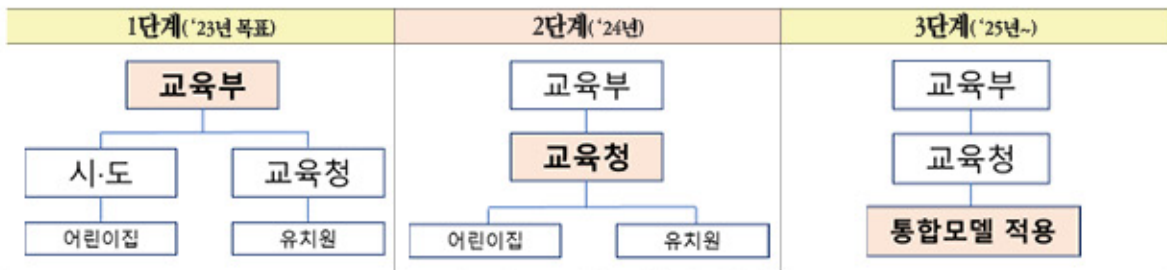
유보통합은 지난해 12월 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26일 공포되어 올해 6월 27일부터 그 시행이 확정되었다(「정부조직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일부개정).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이 높아지는 1990년대에 이르러 사회 전반의 출산을 제고, 복지정책 강화, 만 0-5세 아동들에 대한 교육 및 보육에의 지원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더욱 가속되었다. 1991년 보육시설의 근거법이 되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교육법」에 규정된 유치원의 목적을 ‘보육’에서 ‘교육’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령 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의미가 구분되게 되었다. 이후,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1997년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을 제시하면서 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그 당시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확립 방안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강조되었다. 우선, 유아기가 교육투자 효율성이 높은 시기임에도 민간 영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유아교육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높은 비용 때문에 교육기회의 불공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요구가 있었다. 이는 지금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당시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아교육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유아교육 기관 질관리를 통해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유아학교 체제(안)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하였고, 이후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은 확연한 이원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통합 논의는 2005년 육아정책연구소(구, 육아정책개발센터)가 설립되면서 정책적 의지로 나타나게 된다. 이후, 이명박 정부 2012년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유아교육 및 보육 발전을 위한 통합이 공론화되었으며, 2013년 6-12월에 걸쳐 국무조정실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유보통합 추진방안이 마련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유보통합을 대선 공약으로는 내세웠으나, 국정과제로는 미체택하였고, 대

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격차 해소에 집중하는 입장을 취했다. 현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유보통합을 제시하고,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하여, 2023년 1월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교육부, 2023. 1.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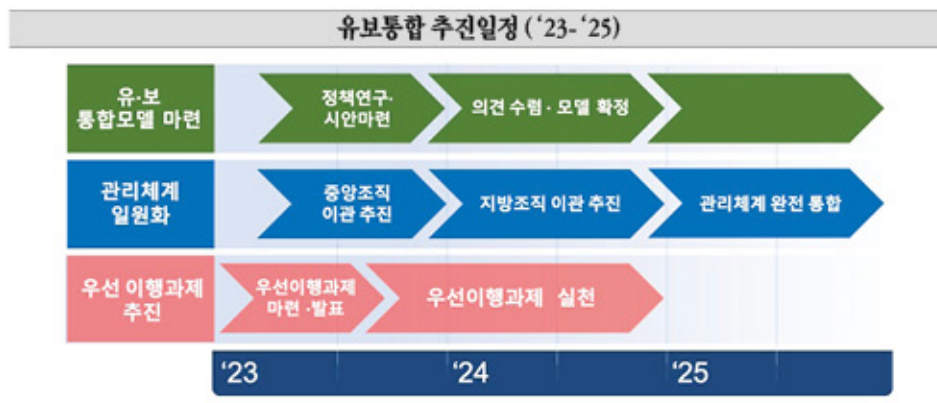
교육부(2023. 1. 30.)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2023. 10. 23.)에 의하면, ‘유보통합’이란,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 교육·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영유아 중심 질 높은 새로운 교육·보육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그림 1]과 같은 유보통합의 3단계 실행방안을 통해 2025년 통합모델 적용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1단계에서는 중앙부처 단위에서의 통합을, 2단계에서는 시도교육청 수준의 통합, 3단계에서는 기초단위까지의 통합으로 유보통합을 실질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림 1] 유보통합의 3단계 실행 방안

※ 참고: 통합모델 일정에 따라, 1~2단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성격은 유지한 채 이관  
출처: 교육부. (2023. 7. 28.).

한편, 구체적인 유보통합의 시기별 추진일정은 [그림 2]와 같이 제안되었다.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살펴보면, 올해 2024년에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의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중앙조직 이관과 하반기 지방조직 이관이 추진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더불어 2025년부터는 모든 기초단위의 지역에서 관리체계를 완전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모델을 적용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따라서 2024년은 우선이행과제를 차근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보통합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이다.



[그림 2] 유보통합 추진일정('23-'25)

출처: 교육부. (2023. 9. 13.).

그동안 사회적 논의 수준의 담보 상태에서 유보통합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계기로 중앙부처 수준에서는 적어도 2024년 6월 27일부터 인력과 예산의 이관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또한,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위해 고심하고 있어 정책의 걸음마는 댄 셈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선 유보통합의 개념에서 강조되었듯이, 국가의 책임교육·돌봄을 실현, 0-5세 모든 영유아에 대한 교육·돌봄 서비스의 차별 없는 제공, 영유아 중심 질 높은 새로운 교육·보육 체계 마련을 유보통합의 정책 실현 과정에서 고수하는 것이다. 유보통합은 과거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유아교육법」 등의 복잡한 법령 체계가 말해주듯이, 이해관계 기관 및 당사자들의 갈등으로 인해 ‘모든 영유아를 위한 수준 높은 교육 및 보육체계 마련’이라는 유보통합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를 결과적으로는 달성하지 못했다.

당장 유아교육과 보육의 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현장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들은 유보통합 정책이 가져올 혼란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유보통합은 향후 우리나라 기간학제(school system)의 시작을 미국의 K-12와 같이 유치원 단계로 내려가서 국가 책임교육제도가 한층 강화되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들을 비롯한 정책입안자들은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들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유보통합이 단순히 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하여 현 체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업무와 인력, 재정의 이관을 손해 없이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항상 유보통합 정책의 궁극적 실행 이유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모든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 체계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정책의 실행이 수렴될 필요가 있다(임문영, 2022). 이 과정에서 특정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이해관계가 조정되고 선의의 합을 이루는 유보통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의 업무는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매우 비합리적인 업무구조, 인력, 재정의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보육과 유아교육의 1+1이 단순 2가 되는 형식적인 논리보다는 3이 될 수 있는 혁신적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실행 단계에서 종래의 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 추진에서의 비효율성, 비합리성을 단계적·지속적·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른 여타의 교육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유보통합 정책은 긴 안목을 가지고 서두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미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나 충분한 실행 계획의 검토 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핀란드는 2001년 유보통합계획 수립, 2003년 통합 교육과정 발표, 2013년 사회보건사업부에서 교육문화부로의 유보통합 실현의 과정을 거침으로서 장장 13년의 과정을 거쳤다. 뉴질랜드도 1986년 이후 10여 년간 교육과정 통합, 인력의 통합 등 각 부문별로 지속적인 통합 정책을 추진하여 유보통합을 완성한 바 있다. 다만, 뉴질랜드조차도 통합 초기 교사 자격요건의 통합, 동일 자격 동일 급여 제공이라는 정책 목표를 아직도 완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통합으로 교육과정, 교사의 자격과 양성체제, 시설 및 운영 등 질적 상향 평준화의 기반을 닦은 것은 전적으로 바람직하나, 특정 정권 내의 완성이나 외부적·정치적 요인으로 조급한 정책 실행을 추진하는 경우 유보분리를 원하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 업무의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의 이관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정치적 리더 집단들이 대승적 차원에서의 조정과 양보, 협업을 보여주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향후 유보통합 정책은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 큰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유보통합은 낮은 출산율, 고령화되는 사회, 지역 소멸의 위기, 환경 및 경제적 위기의 심화 등 우리 사회의 산적한 위기들을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어느 정책이나 비용감수 집단과 편익향수 집단으로의 구분을 가져온다고 하나, 유보통합은 특히나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신뢰가 필요하고,

기존 유아교육 및 돌봄서비스에 대한 해없는 정책(harmless policy)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제시할 통합모델을 이행하기 위한 과제 실현, 실천 가능한 통합모델의 단계적이고 명확한 제시를 통해 유보통합 정책이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부모들에게 보다 신뢰로운 정책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23. 01. 30.). 출생부처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유보통합 추진 방안. 보도자료.  
교육부(2023. 07. 28.).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안). 보도자료.  
교육부(2023. 09. 13.).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 보도자료.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2023. 10. 23.). 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  
엄문영(2022). 유아교육·보육 통합 재정확보 방안 모색. 육아정책 Brief 92호. 육아정책연구소



| 시론 |

## 교육적 이상의 실현을 위한 도전과 과제, 학생맞춤통합지원

최 예 슬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은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소득격차와 교육 불평등의 심화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들 뿐 아니라,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이 광범위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학생이 타고난 배경과 환경에 관계없이 개인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담보해야 할 공적 책무이자,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상으로서의 본질적 가치일 것이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추진과 의의

최근 공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교육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시도로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라는 도전이 시작되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경제적 어려움, 학습, 심리·정서 문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등 학생의 생태체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개별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교육부, 2023. 11). 구체적으로 단위학교 내 교직원들이 협력하여 학생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통합지원지원팀을 구성하고,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협력과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여 학생 개인의 필요와 성장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2023년 23개 시범교육청, 96개 선도학교의 시범적인 운영을 시작으로, 2024년 46개 시범교육청, 248개 선도학교로 확산하였으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위한 컨설팅, 담당자의 인식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통해 현장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체제 구축과 학생지원에 대한 개인정보 공유 등을 골자로 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발의(2023. 5. 31)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교의 학생 지원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를 시범 운영하는 등 사업 지원체계 역시 갖추어 나가고 있다.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교육복지국가(edutopia)’ 구현이 언급된 이후, 한국 사회는 약 30여 년간 무상의무교육 등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그 체계를 발전시켜왔다(김신복 외, 2017). 특히 취약계층 집단의 교육적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작된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이자,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신호탄과 같았다. 이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교복우)으로 명칭이 바뀐 이 사업은, 교육복지의 필요성을 알리고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복우 사업의 초기 모델을 살펴보면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유사하게,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연결할 수 있는 가정, 학교, 지역의 '통합지원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정원 외, 2010).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Wee 프로젝트, 기초학력 지원 등 개별 영역에 특화된 유사 지원사업들이 발전하면서, 교복우 사업의 정체성은 약화되고 각 사업 주체별 분절적이고 중복적인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 간 협력·연계 조정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이광현 외, 2020). 이에 학생들이 직면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사업별 지원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기존의 교육복지 관련 사업과 거버넌스를 학생 중심의 진정한 통합지원체제로 재구조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김정원 외, 2008; 박상현 외, 2021; 이해영 외, 2011; 이희현 외, 2019; 이광현 외, 2020).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은 그간 시행되어 온 교육복지 지원사업 체계가 안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 개인의 복합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교육 체계 내에서 교육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학생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은 단순히 교육복지 서비스를 재구조화하고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 중심의 공교육 패러다임으로의 근본적 전환을 지향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한 과제

향후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산된다면, 우리나라 공교육 체계는 보다 학생 친화적이고 교육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정책이 기존 교육복지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교육 내 학생 지원 시스템의 근본적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경직된 체계, 사업별로 분절된 행정 및 재정 구조,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조직문화 등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초기의 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과제를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교육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의 본래 목적이 구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현장에서의 실천이며, 이는 정책의 주체인 '사람의 힘'이 모아져야만 가능하다. 출발 단계에서 새로운 정책의 명확한 비전과 가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아직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교육복지 관련 사업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정책 실현 주체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감과 지지를 얻는 작업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둘째, 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개선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현장에 내실 있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원과 관리자의 적극적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현장의 관리자들과는 사회정의(social justice)의 관점에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을 포용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형평적 리더십(equitable leadership)을 발휘해야만 한다. 또한 교직원들이 학생의 특성과 통합지원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학생들의

어려움과 요구를 민감하게 포착하여 교육과정 내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과 가장 밀접히 상호작용하는 학교 내 교직원들이 통합지원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만 현 정책이 살아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통합지원체계의 작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외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활용해야만 하며, 이는 단위학교 차원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학교, 교육청,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주체 간 역할 분담과 연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이 '서로 함께'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각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여건이 상이한 만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화된 거버넌스 모델을 고민하고 설계해 나갈 때, 비로소 통합지원체계가 내실 있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장 운영체계의 재구조화뿐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행·재정적 지원과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문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 방안, 단위학교 내에서 효과적인 학생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합적 예산 운영과 긴급 지원을 위한 예산 체계의 정비,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통합적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역 간 교육격차는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저해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취약 지역의 경우 학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과 연계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거시적으로 교육 여건과 문화, 복지, 의료 등 인접 영역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 역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첫 걸음을 시작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까지는 풀어야 할 더 많은 크고 작은 숙제들과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것이 교육의 궁극적 존재 이유임을 잊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 현장의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희망의 마음을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22. 12. 28).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안).
- 김신복, 김인희, 김재춘, 서정화, 신정철, 이무근, 이종재, 천세영, 최운실(2017). 교육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정원, 김경애, 김민, 김영삼, 김효진, 박인심, 양병찬, 이경상, 이정선, 이지혜, 이화정, 허남순, 홍봉선(2010). 교육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이시습.
- 김정원, 김성식, 김원경, 김홍원, 김홍주, 문무경, 박효정, 이병환, 이선호, 이재분, 임연기, 정영식, 최상덕(2008). 교육 복지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상현, 정영모, 권순정, 이근영, 이혜숙(2021). 학생 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이광현, 이미영, 이경남, 형일지, 김정현, 백선수, 안해용, 윤영애, 송진욱, 하용철, 박수영, 송민영(202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장기 마스터 플랜 연구.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 이혜영, 류방란, 김경애, 김경희, 김민희(2011). 교육복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현, 황준성, 유경훈, 정동철, 이주하, 김성기, 오상아(2019). 교육복지정책 평가 및 개선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시론 |

## 교사 입장에서 바라본 늘봄학교

장민경 | 서울신곡초등학교 교사

아이들에게 ‘너는 나의 봄이다’를 주제로 사진을 찍어보라고 했다. 어떤 아이들은 벚꽃을, 어떤 아이는 민들레를, 어떤 아이는 햇살을 프레임에 담았다. 나는 그렇게 봄을 찾는 아이들을 나의 봄이라 칭하며 사진에 담았다. 늘, 봄과 같은 학교를 꿈꾸는 듯한 ‘늘봄학교’는 ‘전일제학교’의 다른 명칭으로, 독일 사례인 ‘전일제학교(Ganztagsschule)’가 아동을 학교에 강제로 오래 있게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여 늘봄학교로 이름을 정했다(교육부, 2023. 1. 9.).

학교현장에서 학부모들과 아이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중 동료교사들과 가장 많이 나누는 이야기는 “엄마들이 자녀에 대해 너무 모른다”이다. 고경력 교사들은 이전에도 가정과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모습에는 항상 차이가 있어서 부모들과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생각에는 단차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에서의 생활모습’을 모르는 경우는 많았지만 지금처럼 자녀가 ‘가정에서도 무슨 생각을 하며 자내는지, 자녀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는’ 상황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당연히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동료교사들과 그 원인에 대해 고민해 본 결론은 ‘만2세 이후부터 대개 기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으로 도출하였다.

늘봄학교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하기 전에 이 지점에 대한 물음표부터 던져보고 싶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사회의 문제로 주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문제인가? 기관에서 매년 다른 주양육자가 아이를 맡고, 부모는 여러 새로운 주양육자들이 이야기한 아이에 대한 면모를 짜깁기한 상태로 학교에 입학시키는 현실은 당연한 것인가?

물론 시대가 변했고, 맞벌이 가구가 대부분이며, 육아와 자녀 돌봄 책임의 많은 비중을 부모에게 전가할 수 없음을 전제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김혜진, 최영(2022)은 돌봄의 사회화는 크게 국가, 시장, 제3섹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중 가족 기능의 변화나 성역할의 변화에 따른 돌봄의 결핍을 거시적인 신사회적 위협으로 보고, 이에 대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대응하여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사회화 시키는 것을 돌봄의 사회화 정책 또는 돌봄 정책이라고 정의하였다. 돌봄 부담의 사회화에 매우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늘봄학교 문제에서 ‘zoom out’ 하여 바라보아야 하는 좌표가 ‘오후에 아이를 어디서 돌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자라야 하는가’는 지점이기 때문이고, 이는 현재 학교에서 매해 늘어나는 다수의 정서위기학생, 한 학급에 약 20% 정도씩 나타나는 ADHD, 우울, 분노조절과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가진 학생과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현직 교사로서의 우려가 바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물음표를 잠시 미뤄두고, 다시 ‘zoom in’ 하여 현재 눈앞에 닥친 문제인 ‘늘봄학교’로 돌아가 학교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쟁점을 정리해 보았다.

1. 학교란 무엇인가? 교육을 하는 곳인가? 돌봄은 교육인가?
2. 학생들은 학교에서 저녁까지 있는 것이 행복한가? 왜 학교여야 하는가?
3.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 결합에서 교사 업무가 과중 되지 않을 수 있는가?
4. 학교에 유휴공간이 충분한가? 이미 돌봄교실 사용을 위한 겸용교실 사용으로 교사들이 교실에서 쫓겨난다. 초등학교에서 학급이라는 공간이 교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5. 초등학교에서 현재 늘봄학교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정말 모두를 위한-대상을 선별하지 않는-정책인가?
6. 늘봄학교는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가?
7. 늘봄학교 전담교사의 질은 누가 보장하는가? 자격과정, 연수과정, 질관리에 대한 논의가 없이 어떻게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 대체제로 홍보할 수 있는가?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내용을 재점화하여 정리하면 이상과 같은 일곱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 있으나, 짧은 시간에 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구문제로 남겨두고, 여기서는 학교와 교사는 왜 늘봄학교에 부정적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교사의 입장에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은 ‘교사 본연의 업무’ 라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수의 서울시 교육청 공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교사 본연의 업무란 ‘수업’ 과 ‘생활지도’ 이다. 이외에 학급운영, 학부모와 학생상담, 연수, 각종 장학, 학생을 위한 행정업무, 학생들을 위해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결가지 업무라고 여긴다. 그러한 이유로 상기한 업무들은 수업과 생활지도에 다소 방해되거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업무의 측면에서 수행한다. 그렇다면 ‘방과후학교’ 나 ‘돌봄교실’ 은 어떠한가? 이들은 본연의 업무도, 본연의 업무를 위한 결가지 업무도 아니다.

먼저, 방과후학교는 처음에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교육격차 감소를 위하여 추진되었고, 그런 의미 있는 목적을 가지고 학교로 들어오는 사업에 그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라는 폭탄을 학교에 떨어뜨려놓고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방과후학교’ 는 학교에서 가장 기피하는 ‘3D 업무’ 중 하나로 전락하였고, 결국 민간업체 참여, ‘방과후코디’ 라는 일자리 창출로 학교를 달래가며 운영하였지만, 결국 코로나-19부터 쇠락해가는 애물단지로 학교 현장에 남아 있다. ‘돌봄교실’ 도 돌봄의 사회화 관점에서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안전한 아이 돌봄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가지고 학교에 투하되었지만, 현재 학교에서 가장 민원과 요구사항이 많은 사업으로 나날이 번창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공통점은, 도입 시 목적과 취지는 매우 거창하고 이상적이었다는 점, 그러나 그 목적과 취지가 교사들이 생각하는 ‘본연의 업무’ 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점,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현장과의 협의가 없이 상명하달식으로 던져져 한 명의 운 나쁜(?) 업무담당교사의 파담으로만 운영되었다는 점, 심지어 업무담당교사가 있어도 담임교사들에게 이와 관련한 민원과 갈등 조정의 해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배당되고 있어 교사들의 반감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결론으로는 일단 던져놓으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교사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사업들은 학교에서 소외된 채로 잔정성 없이, 결합기식으로 운영된다. 늘봄학교가 이러한 과거 사업들의 실패에 대한 고민과 변화 없이 왜 ‘늘봄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것이 교육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교사의 본연의 업무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연계하여 학교에 다가가지 못한다면 교원들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고, 위의 사업들처럼 질 관리에 실

패한 채로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서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지금까지의 새로운 정책 실현 과정에서 빠짐없이 경험한 바와 같이, 어떤 형식으로든 교사의 업무를 과중시키고, 명확하지 않은 책임소재 문제로 피로감이 쌓일 것이며, 돌봄교사 혹은 늘봄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 채용 및 관리 등의 예상되는 문제들이 줄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성희 외(2023)는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돌봄에서 주체별 권한과 책임, 재원 분담, 협력의 범위 등 다양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고, 운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컨트롤타워와 원활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원 조직들이 부재 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결국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돌봄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화 및 법제화를 이루어 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성희 외(2023)는 현장 전문가들은 초등 늘봄 정책의 책임이 일선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떠넘겨진다면 지속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특히 학교 내부에서는 프로그램 비용인 사업비보다는 인력의 충원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보고서에서 말하는 바가 정확히 현장에서 우려하는 바이다. 주체별 권한과 책임이 법률로 명시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확실히 경감시켜 줄 인력이 충원되며,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버려지는 이전 사업들과 예산들에 대한 불편감을 감소 시켜준다면 새로운 정책 실행에 대해 조금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있는 학생들이 과연 행복한가 혹은 긍정적인 심리상태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수업이 끝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누구보다 빨리 교실을 떠나고 싶어 한다. 목적이자 집이든, 운동장이든, 놀이터이든 학습의 공간에서 벗어나 편안함과 즐거움의 공간으로 이동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교사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의 문제와는 별개이다. 때때로 하교 후에 늘 친구가 없거나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방황하긴 하나, 다른 친구가 부르면 잠깐의 주저함도 없이 가방을 들고 뛰쳐나간다. 이처럼, 돌봄교실을 즐겨워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뒷모습을 부러워하는 학생들을 현장에서는 훨씬 많이 볼 수 있다. 이희현(2023)은 기간 초등 돌봄 논의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 설계로 행, 재정적 노력이 비교적 쉬운 방식으로 추진하였고, 공적 돌봄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채, 아동이 행복하게 돌봄을 받을 권리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희현(2023)은 실질적인 초등 돌봄의 수요자인 아동이 방과후에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하며 보내고 있는지, 또한 방과후에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보내고 싶은지에 대해 조사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최근 이루어지는 돌봄 정책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의 입장, 학생의 의견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제야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이제까지 돌봄교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요구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늘봄학교 또한 참여 학생의 인식에 대한 사전 조사 계획이나 시범학교 대상 학생 인식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최근 늘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교장님이 “늘봄에서 너무 재미있는 걸 하면 방과후 신청이 없어질까봐 걱정이다. 학습을 시키려고 하니 강사의 질 담보가 어렵고, 아이들이 수업 후에 또 공부를 해야 하는 점이 마음이 아프다. 교사들에게 한 시간 혹은 두 시간을 맡아서 학습지도나 간단한 방과후 활동을 개설해달라고 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고민이 너무 많다. 차라리 방과후학교 과정에 늘봄 신청 학생들 수강 비용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왜 꼭 분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교장으로서의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과연 늘봄학교 정책입안자들은 이 교장님처럼 학생, 교사, 학교, 방과후학교 강사까지 고려하여 정책을 구상하였는지 의구심이 드는 지점이었다.

이성희 외(2023)는 연구보고서에서 돌봄은 사립도, 서비스도, 복지도, 노동도 아닌 “관계”로 개념화 되고, 이러한 애정과 신뢰를 쌓는데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관계’로서의 돌봄 개념은 초등 늘봄 정책에서 단발적인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학생들과 애정 어린 지속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학생들의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함을 시사한다고 했다. 작년부터 교육부 정책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컨설턴트’ 연수에서 한 연수생이 “아무리 있던 것들을 잘 통합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새로운 정책 사업 피로도가 높은 교사들에게는 생가시고 번거로운 일일 것이다. 그들에게 학생 개개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설득시키는 것이야말로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타오르게 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이 바로 학교에서 새로운 정책을 실현 시키는 ‘지속가능하게 하는 동력과 궤를 같이하는 말일 것이다.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끔, 교사 본연의 업무와 돌봄의 연계성을 논리적으로 납득하게끔, 그리하여 그 업무가 그저 학교의 짐이 되지 않게끔,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학생이 존중되게끔 하는 정책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은 전면 실시를 앞둔, 바로 지금이다. ‘늘봄학교’가 정부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도 늘봄과 같은 학교’가 되는 것을 바라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23. 01. 09.). 2025년부터 전국에서 ‘늘봄학교’ 운영...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 보도자료.
- 교육부(2023. 01. 28.).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 계획 발표 - ‘24년 1~2학년 돌봄교실 3,983실 추가 확충’-. 보도자료.
- 교육부(2023. 02. 27.). 올해 첫발을 내딛는 214개의 늘봄학교, 3월부터 운영 시작. 보도자료.
- 교육부(2023. 05. 17.).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 보도자료.
- 교육부(2023. 08. 17.). 2학기 늘봄학교, 2배 이상 늘어난다. 보도자료.
- 김혜진, 최영(2022). 이용자의 권리보장 수준을 통해 본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국가 간 비교연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적용-.한국가족복지학, 69(2), 253-285.
- 이성희, 김진희, 이상민, 이선영, 최예슬(2023). 전일제 학교 제도화 방안 연구: 초등 늘봄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현(2023). 늘봄학교 안착을 위한 초등돌봄체계 진단과 과제.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31-45.

## • 2024년 학회주요소식 •

### 1. 52대 사무국 소개

한국교육행정학회		홈페이지: <a href="https://www.keas1967.com/">https://www.keas1967.com/</a> E-Mail: <a href="mailto:keas1967@daum.net">keas1967@daum.net</a>
학회	주소	(0415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마스터즈타워빌딩) 9층 902호
사무국장	성명	김재현(한국교원대학교, <a href="mailto:keas1967@daum.net">keas1967@daum.net</a> )
간사	성명	총무간사: 김어진(한국교원대학교) - 업무: 학회 및 학술대회 총괄업무 - <a href="mailto:keas1967@daum.net">keas1967@daum.net</a> , 010-9808-8116
		총무부간사1: 유나은(한국교원대학교) - 업무: 홈페이지 관리 등 행정 관련 업무
		총무부간사2: 박민우(한국교원대학교) - 업무: 회계 관리, 법인 등 행정 관련 업무, 회원 및 납부 관리
		편집간사: 신원규(국립공주대학교) - 업무: 교육행정학연구 투고 및 발간 관련 업무 - <a href="mailto:keas1967@nate.com">keas1967@nate.com</a>
		편집부간사: 신윤미(국립공주대학교) - 업무: 교육행정학 연구 투고 및 발간 업무 지원, 게재료 납부 확인

## 2. 학술지발행

### 「교육행정학연구학술지」 발행일정

교육행정학연구(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는 사회과학분야의 등재학술지입니다. 2004년 이래 등재학술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접수)하고 있으니, 연구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권호	접수 마감일	발간 예정일	
42권	1호	2024년 02월 29일	2024년 04월 30일
	2호	2024년 04월 30일	2024년 06월 30일
	3호	2024년 06월 30일	2024년 08월 31일
	4호	2024년 08월 31일	2024년 10월 31일
	5호	2024년 10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문의 : 신원규 편집간사 (keas1967@nate.com)

#### 「교육행정학연구」 논문투고 및 인용 활성화 요청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에서 발행되는 「교육행정학연구」는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꾸준히 교육행정 전반의 깊이 있는 연구로 한국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정되어 있는 등재학술지 계속 평가와 관련하여 논문의 투고율과 인용지수가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어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논문 투고와 KCI 논문 인용을 부탁드립니다.

※ KCI 인용지수는 재단 우수등재, 등재, 등재후보 학술지 간의 인용된 횟수만을 가지고 산출된 지수로서, 해외 학술지에 인용된 횟수는 포함되지 않음.

※ 논문의 저자가 피인용문헌을 기재할 때,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권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KCI 인용지수 산출시 누락될 수 있음.

## 학회지 발행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본 학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교육행정학연구」는 2000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2004년에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후 명실상부 교육행정 분야의 가장 영향력 있는 학술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앞으로도 그 동안 여러 선배들께서 이룩해 오신 발자취들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학회지 발간 업무(논문 접수, 심사, 편집, 발간, 공시 등)와 관련하여 심야 시간이나 주말 및 공휴일 등에 편집간사나 부간사 개인 휴대전화로 문의나 요청이 과도한 상황이며, 전일제가 아닌 간사들의 개인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심야 시간이나 휴일 중 긴급한 문의나 요청의 대부분은 논문 제출기한 연장 요청이거나 가능 여부 문의, 증명서 발급 요청 등으로 어차피 반영이 불가능하거나 심야나 휴일에 처리가 어려운 사안들이었습니다.

2024년도 한국교육행정학회 1차 이사회(2024.1.26.)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회원님들께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고 「교육행정학연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편집간사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학회지 발간과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사항]

#### 1. 학회 홈페이지에 편집간사의 휴대전화 번호 삭제 및 이메일 주소만 공개

- 학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 접수, 심사, 편집, 발간 일정은 미리 공지된 일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일정을 지키지 못한 경우 심사 및 발간 대상에서 제외
- 학술지 발간 등에 대한 질문 및 요청은 이메일(keas1967@nate.com)만 가능

#### 2. 편집위원회 및 간사의 공식적인 업무 시간은 “월~금, 9시~18시”로, 업무 시간에 접수된 이메일 내용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및 회신

- 학술지 발간 등에 대한 안내와 접수, 처리 등은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안내되는 발간 관련 일정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질의 및 요청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시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이메일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새로운 제도와 운영 방식으로 인해 「교육행정학연구」에 논문 투고를 준비하고 계신 회원님들께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3. 회비납부안내

학회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 회원님들의 회비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연회비와 이사회비를 상시 수납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연회비 및 이사회비 규정을 참고하시어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목	회비
이사 임원회원 이사회비	100,000원
일반 정회원 연회비 (* 정년퇴직한 비이사회원은 면제)	50,000원
학생(전일제) 회원 연회비 (* 전일제 석사과정생에 한정함)	30,000원
기관회원 연회비	100,000원
신규회원 입회비(* 개인 및 기관 회원 공통)	10,000원

※ 2021년부터 정회원비 3~5회분 선납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4. 학회행사소식

#### 가. 2024년 포럼운영위원회 1차 포럼 개최

- 1) 주제: 한국 교사 전문성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교사 전문성 기준 국제 사례 분석
- 2) 목적: 한국교육에서 교사의 미래소양, 현장성, 적·인성, 거버넌스 등의 전문성에 대한 국제 사례(캐나다, 싱가포르) 분석 결과 공유
- 3) 일시: 2024년 4월 3일 (수) 14:00~16:00
- 4) 장소: 페이토 호텔 강남(페이토홀)
- 5) 운영 방식: 대면 및 온라인 스트리밍
- 6) 주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 7) 주관: 한국교원교육학회 포럼위원회





## 나. 2024년 5개 학회 연합학술대회 개최

- 1) 주제: 국가교육발전의 쟁점과 과제
- 2) 일시: 2024년 4월 20일 (토) 10:30~16:40
- 3) 장소: 대구교육대학교 인문사회관 107호
- 4) 참여학회: 한국교육원교육학회(주관),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제정경제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 다. 2024년 2차 이사회 개최

- 1) 일시: 2024년 4월 20일 (토) 13:00~13:30
- 2) 장소: 대구교육대학교 인문사회관 205호
- 3) 참석: 학회 이사, 학회장, 사무국 담당자 등
- 4) 안건: 소석논문상 규정 개정(안) [원안 통과]
- 5) 안건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 가) 소석논문상 규정 개정내용

기 준	개 정	개정이유
제6조(논문상 대상 및 추천) ②수상과 추천은 전전년도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중에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각각 1편씩을 추천한다. ①항, ③항 (생략)	제6조(논문상 대상 및 추천) ②수상과 추천은 전전년도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중에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각각 순위를 정하여 2편씩을 추천한다. ①항, ③항 (현행과 같음)	소석논문상 수상과 선정 절차의 현행화( 및 타당화)
제7조(논문상 심사 기준 및 절차) ②수상작의 결정은 위원의 무기명 투표에서 최다득표 논문으로 하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항, ③항 (생략)	제7조(논문상 심사 기준 및 절차) ②수상작의 결정은 위원의 무기명 추천을 통한 최다 추천 논문으로 하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항, ③항 (현행과 같음)	소석논문상 수상과 선정 절차의 현행화( 및 타당화)
제10조(포상) ②포상에 필요한 비용은 소석논문상 운용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으로 충당한다. ①항 (생략)	제10조(포상) ②포상에 필요한 비용은 소석논문상 운용 기금에서 충당한다. ①항 (현행과 같음)	소석논문상 포상 규정의 현실화

기 존	개 정	개정이유
<p>[소석논문상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칙] 제3조(수상 논문 결정) 규정 제7조에서 정한 수상 논문 결정을 위한 무기명 투표의 결과 동수인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 논문으로 결정하며, 2차 투표 결과에도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p>	<p>[소석논문상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칙] 제3조(수상 논문 결정) 규정 제7조에서 정한 수상 논문 결정을 위한 무기명 추천의 결과 1순위 최다 추천 논문으로 하위 동수인 경우에는 2순위 추천이 많은 논문으로 한다. 2순위 추천까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p>	<p>소석논문상 규정(상위규정)과 소석논문상 규정 시행 세칙(하위규정)과의 연계</p>
	<p>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나) 기금 규정 개정내용

기 존	개 정	개정이유
<p>제6조(기금사용제한)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원금에 따른 이자소득에 한해 본 회 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다.</p>	<p>제6조(기금사용제한)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원금에 따른 이자소득에 한해 본 회 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다. <u>단, 필요 시 기금의 운용 상황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u></p>	<p>기금규정(상위규정)과 소석논문상 규정(하위규정)과의 연계</p>
	<p>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라. 2024년 학회 임시총회 개최

- 1) 일시: 2024년 4월 20일 (토) 16:40~17:20
- 2) 장소: 대구교육대학교 인문사회관 107호
- 3) 안건
  - 가) 소석논문상 규정 개정
  - 나) 전임 회장 및 사무국 대상 공로패 수상
    - 제 51대 학회장: 김병주(영남대 교수)
    - 제 51대 사무국장: 구성우(신한대 교수)
    - 제 51대 총무간사: 권혁기(영남대)
    - 제 51대 총무부간사: 박명현(영남대)
  - 다) 학위취득기념패 수상
    - 서시연(한국교원대 박사)



## 마. 향후 학술대회 개최

- 1) 포럼운영위원회 2차 포럼
  - 가) 주제: 리더십과 교육 협력체제
  - 나) 일시: 2023년 5월 17일 (금), 15:00~
  - 다) 장소: 한국교원대학교 미래도서관 소공연장
  - 라) 주최: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학교건설협회, 학교경영연구소
- 2) 세대교류연구위원회 1차 포럼
  - 가) 주제: 현장 교원이 생각하는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내용과 방법의 문제
  - 나) 일시: 2023년 5월 18일 (토), 10:00~12:00
  - 다) 참가 방법: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비대면 줌(Zoom) 접속 (회의 ID: 564 238 6380 / 암호: keas)
  - 라) 주최: 한국교육행정학회 세대교류연구위원회
- 3)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 가) 발표자 및 토론자: 중국, 일본, 한국 연구자
  - 나) 일시: 2024년 9월 7일 (토) 14:00~17:00 (예정)
  - 다) 언어: 영어로 통일, 필요한 경우 통역 사용
  - 라) 주제 및 장소: 향후 확정(예정)
- 4) 2024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 가) 일시: 2024년 11월 23일 (토)
  - 나) 장소: 한국교원대학교

## 5. 회원 동정 및 신간 안내

### 가. 회원 신간 안내

〈다양성·소통·상호작용·결속 시대의 다문화 교육 - 다문화 교육의 대안: 상호문화교육〉 신재훈 저 / 동문사 / 2024.3.5.



이 저서는 유·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의 핵심 내용과 실제 적용방안, 상호문화교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취지로 집필되었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해, 제2장 한국 다문화사회의 현황, 제3장 다문화가정 학생의 실태, 제4장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다문화 교육정책과 지원, 제5장 다문화 교육의 이해, 제6장 다문화 교육의 실천, 제7장 다문화 학생을 위한 상담, 제8장 상호문화주의 교육, 제9장 세계 주요국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 교육 등을 다루었다.

따라서 본 저서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쓰면서 〈학습 목표〉, 〈Keyword〉, 〈생각해 봅시다〉 등을 포함함으로써 교육현장의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저서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한국 다문화 교육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는 후학들에게 길잡이의 구실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육연구논문작성법〉 박수정, 이희숙, 김선영 저 / 박영스토리 / 2024.4.5.



교육 연구와 논문의 작성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질문에 대해 차근차근 안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논문작성 안내서이다. 교육연구논문 작성의 기초와 실제 그리고 양적, 질적 연구논문 작성의 핵심을 소개하였다. 교육학 및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를 위해 집필하였고, 특히 교육행정학 전공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 목차

- 1장 교육연구논문 시작하기 (박수정 충남대 교수 집필)
- 2장 양적연구논문 작성하기 (이희숙 강남대 교수 집필)
- 3장 질적연구논문 작성하기 (김선영 경남대 교수 집필)
- 4장 교육연구논문 완성하기 (박수정 충남대 교수 집필)

## 6. 2024년 회비납부 명단(2024년 4월 21일 기준)

### 1) 2020년 5개년 회비 납부자 명단(5명)

구성우 김병찬 나민주 엄문영 허병기

### 2) 2024년 신입회원 회비 납부자 명단(35명), (s: 학생회원)

구유정 구태진 김경은 김두섭 김수혁s 김승정 김유정s 남혜정 박근아 박민우s 박세희 박소정  
 박수진 박승종 박지수s 박지에 박지현 박철규 신창기 오혜선 유나은s 이무성 이병주s 이선희  
 이채윤 이한나 임철일 장혜원 전유립 정민지 정영식 조민정 조정윤 홍지환 황윤정

### 3) 2024년 기존회원 회비 납부자 명단(152명), (s: 학생회원)

강미리 강원근 강계혁 강지영 고은애 고 전 공희정 광연륜 권초아 김갑성 김건희 김경원  
 김경희 김도기 김도훈 김무영 김민규 김범주 김병찬 김선유s 김선이 김어진s 김 용 김용일  
 김은수 김인재 김정아 김정희 김지선 김지현 김지현 김택균 김하얀 김한나 김한나 김혜진  
 김효은 김희성 나 라s 류명혜 류민영 류성창 문영빛 문지영 문혜빈 민윤경 박남기 박대권  
 박동찬 박상완 박선형 박소영 박소영s 박수아 박수정 박수현 박영숙 박용권 박유민 박정우  
 박주형 박희진 배소현 배정훈 변기용 변수용 서유립 서지영 서화정 손판이 송경오 송기창  
 송인영 송지나s 신광윤 신상명 신계흠 신정철 신현석 심현기 안영은 안혜연 양성관 염민호  
 오범호 오승천 오재준 오혜근 유길한 윤소희 윤 정 윤혜원 윤혜정 윤홍주 이근수 이기용  
 이길재 이미희 이보미s 이상철 이서연 이석열 이세영 이수경 이수전 이수정 이승현 이영신  
 이원재 이유진 이인서 이인수 이인희 이재덕 이지연s 이현주 이호준 이희석 임서영s 장나영  
 장서진 장수정 장신애 정광호 정상명 정설미 정성수 정수연 정수현 정제영 조경식 조석훈  
 주영효 차성현 차지철 채계은 최연우 최예슬 최우석s 최원석 최윤실 최윤정 최지원 최혜인  
 하동엽 하은호 허 주 홍창남 황계운 황정훈 황준성 황현철

### 4) 법인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4명)

고 전 박선형 김도기 변기용

### 5)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39명)

권순형 김민조 김병찬 김 용 김정희 김한나 김희규 박대권 박상완 박수정 박영숙 백정하  
 서계영 서지영 서화정 송경오 신계흠 신정철 양성관 오범호 유길한 윤홍주 이기용 이길재  
 이석열 이수정 이쌍철 이인희 이재덕 이희숙 정성수 주영효 주현준 차성현 채계은 최원석  
 허 주 홍창남 황준성

### 6) 2024년도 기관회원 납부(1곳)

나이스북(경기도교육연구원)

※ 연회비 또는 이사회비를 납부하셨으나 납부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 학회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 7. 제 52대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임원

## ■ 회장단

- 회 장 : 김도기(한국교원대학교)
- 부 회 장 : 변기용(고려대학교)
- 감 사 : 염민호(전남대), 김갑성(한국교원대)

## ■ 이사회

## • 당연직 이사(34인)

신극범	신철순	김명한	남정걸	이형행	윤정일	신중식	김신복	주삼환	이종재
서정화	노종희	강무섭	강인수	박종렬	정영수	김명수	신재철	송광용	임연기
허병기	이윤식	박세훈	김성열	신현석	주철안	김해숙	반상진	박남기	고 전
박선형	김병주	김도기	변기용						

## • 선임직 이사(70인)

고장완 (성균관대)	권순형 (KEDI)	김갑성 (한국교원대)	김규태 (계명대)	김덕희 (우송대)
김민조 (청주교대)	김민희 (대구대)	김병찬 (경희대)	김왕준 (경인교대)	김 용 (한국교원대)
김용련 (한국외대)	김이경 (중앙대)	김정희 (대교협)	김한나 (총신대)	김훈호 (국립공주대)
김희규 (신라대)	나민주 (충북대)	남수경 (강원대)	박대권(국학중앙연구원)	박상환 (부산교대)
박소영 (숙명여대)	박수정 (충남대)	박영숙 (KEDI석좌)	박종필 (전주교대)	박주형 (경인교대)
백정하 (대교협)	서제영 (한남대)	서지영 (용인대)	서화정 (대구대)	송경오 (조선대)
신재흠 (한성대)	신정철 (서울대)	신철균 (강원대)	안선희 (중부대)	양성관 (건국대)
엄문영 (서울대)	오범호 (서울교대)	유길한 (진주교대)	윤홍주 (춘천교대)	이광현 (부산교대)
이기용 (국립안동대)	이길재 (충북대)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이동엽 (KEDI)	이석열 (남서울대)
이성희 (KEDI)	이수정 (세종대)	이승호 (KEDI)	이쌍철 (KEDI)	이인희 (제주대)
이재덕 (한국교원대)	이정기 (고신대)	이정미 (충북대)	이희숙 (강남대)	임수진 (광주교대)
전제상 (공주교대)	정성수 (대구교대)	정수현 (서울교대)	정제영 (이화여대)	주영효 (경상국립대)
주원준 (대구교대)	차성현 (전남대)	채재은 (가천대)	천세영 (충남대 명예)	최원석 (경인교대)
최정윤 (KEDI)	함승환 (한양대)	허 주 (KEDI)	홍창남 (부산대)	황준성 (KEDI)

## ▣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획·홍보 위원회	이재덕 (한국교원대)	정바울 (서울교대)	오유진 (서울문백초)	유경훈 (KEDI)	윤소희 (목포해양대)	이정열 (중부대)
학술위원회	엄문영 (서울대)	박현주 (서울대 Postdoc)	강호수 (경북대)	민윤경 (KEDI)	엄준용 (중부대)	이호준 (청주교대)
			주영효 (경상국립대)	함승환 (한양대)		
학회지편집 위원회	정성수 (대구교대)	김훈호 (국립공주대)	김규태 (계명대)	김영식 (경남대)	송경오 (조선대)	엄문영 (서울대)
			이상철 (KEDI)	이인희 (제주대)	이호준 (청주교대)	주영효 (경상국립대)
조직규정 위원회	윤홍주 (춘천교대)	하봉운 (경기대)	권순형 (KEDI)	김용남 (KEDI)	김지연 (지방재정연구원)	박소영 (숙명여대)
			원세림 (강원대 교육재정증집연구소)	이선호 (KEDI)	이호준 (청주교대)	
재정기금 위원회	오병호 (서울교대)	박주형 (경인교대)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문관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우한솔 (삼성경제연구소)	이승호 (KEDI)
			한은정 (인천대)			
포럼운영 위원회	허주 (KEDI)	최원석 (경인교대)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김영식 (경남대)	심현기 (국립공주대)	이승호 (KEDI)
			임선빈 (KEDI)			
국제학술 위원회	김한나 (충신대)	이재덕 (한국교원대)	권순형 (KEDI)	김민조 (청주교대)	김정희 (대교협)	김지신 (국립목포대)
			박효원 (KEDI)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이수정 (세종대)	함승환 (한양대)
학술편찬 위원회	박수정 (충남대)	주현준 (대구교대)	김혜진 (KEDI)	박정우 (대전교육청)	송경오 (조선대)	신범철 (인천교육청)
			신철균 (강원대)	이진권 (KEDI)	이호준 (청주교대)	임희진 (충남대)
정책연구 위원회	이동엽 (KEDI)	강호수 (경북대)	정바울 (서울교대)	최원석 (경인교대)		
			모영민 (KEDI)	박희진 (계명대)	송효준 (KEDI)	신경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수빈 (성균관대)	이혜나 (한국고용정보원)		

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신진학자 지원위원회	김훈호 (국립공주대)	김영식 (경남대)	김지연 (지방교육재정연구원)	문천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신철균 (강원대)	심현기 (국립공주대)
			이쌍철 (KEDI)	정성수 (대구교대)		
부회장선출 관리위원회	이정미 (충북대)	김민희 (가천대)	오세희 (인제대)	장덕호 (상명대)	주취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채재은 (가천대)
			최정윤 (KEDI)			
윤리위원회	박종필 (전주교대)	유병수 (전주대)	가신현 (고려대 세종)	이경호 (고려대)	임수진 (광주교대)	조성만 (대전서부초)
세대교류 연구위원회	주영효 (경상국립대)	엄준용 (충부대)	김덕희 (대구가톨릭대)	김도훈 (충남삼성고)	윤혜원 (서울상천초)	이동엽 (KEDI)
			정주영 (고신대)			
소석논문상 위원회	노종희 (한양대명예)	(호선 예정)	강인수 (수원대석좌)	김혜숙 (연세대)	박세훈 (전북대)	서정화 (홍익대명예)
			신중식 (국민대명예)	이종재 (법인이사장)	임연기 (국립공주대명예)	주삼환 (충남대명예)
주삼환 리더십상 위원회	박남기 (광주교대)	(호선 예정)	김성열 (경남대)	김이경 (중앙대)	박영숙 (KEDI석좌)	신봉섭 (나사렛대)
			신재훈 (한성대)	천세영 (충남대명예)	한유경 (이화여대)	







#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 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⑥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⑧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 한국교육행정학회